



광주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 지난 30일 광주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주요 내빈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방정부와 인권 - 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3일까지 이어지며, 39개국 98개 도시에서 인권활동가, 전문가 등 2000여명이 참여한다. 광주시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주최한다. > 관련기사 5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뢰 받을 방안 마련하라” 윤석열에 ‘검찰개혁’ 지시

문 대통령 “국민 앞 겸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기에는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수사관행 등 개혁에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 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확정·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았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문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2·전남 2·전북 3... 7석 사라질 위기



<1> 호남 국회의석 감소 불보듯

내년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11월 27일 국회 회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혼란만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혁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선거구가 감소하는 등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전남은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고, 호남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선거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선거제 개혁안 표결이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정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개혁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하면, 광주·전남에서는 인구 하향선이 무너지고 호남에 비해 영남의 현 의석수가 3배라는 점에서 호남 정치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감소에 의석 수 부족한 호남, 선거제 개편으로 직격탄 우려 광주 북·광산구 넘치고 동·남구 부족 ...구간 경계조정 아쉬움

현재로서는 선거법 개혁안이 순항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구를 ‘대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각 당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총선이 치러지는 때 4년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몰린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사수를 위해 선거구 획정에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매년 선거구 개편 과정에 호남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인구 감소 탓이다. 선거법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인구 감소에 호남지역은 언제든 선거구가 축소될 수 있는 구조다.
전남지역의 경우도 이 같은 선거제를 적용하면 5개 이상의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이는 ‘공통 선거구’가 생겨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최대 4개 지자체가 한 선거구에 묶여 있는데 인구수 감소에 따라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이 한 선거구로 통합됐던 것 처럼 5개 이상의 지역이 묶인 거대 선거구가 전남에서도 탄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지역 대표성이 떨어질지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

구수에 맞게 국회의원 수를 배정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다수의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인다면 그 대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역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 경계조정 등 근본대책을 지역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성공했다면 “동남을이나 서구간의 경우에도 인구 하향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지만 지역과 정치권의 반대로 사실상 내년 총선 이전의 경계조정은 물 건너 갔다.
이와 관련,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될 것”이라면서 “선거제 개혁안에는 호남의 의석수 감소 등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다음 선거에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치구 경계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지급

도의회 조례안 통과

내년부터 전남 22개 시·군 농·어·민 24만 여명이 ‘농·어·민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지만, 국가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2면>
전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 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원회가 발의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했다.
상임위 발의안은 전남도와 농민단체, 이보라미(영암 2·정의) 도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조례를 절충한 것으로, 47

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3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놓고 농민단체, 민중당 등은 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반발했지만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전북도가 지난 26일 연간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제정하긴 했지만 어민까지 포함한 조례를 만든 광역단체는 전남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지역 농·어·민이 경영체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씩 농·어·민 수당 지급이 이뤄지게 됐다. 지급 대상인 농·어·민 경영체 경영주의 경우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 3657명 등 24만3122명으로, 전남도와 시·군은 연간 60만원을 각 시·군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지급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가을여행’을 소개합니다

추천여행지 알수록 더 머물고 싶은 필리핀 여행

필리핀
이달의 추천여행지
TOP1 #세계3대비치
보라카이 BORACAY
#호핑투어 천국
TOP2
세부 CEBU

동남아-대만

<p>다낭 하나투어 AVPF13_0 다낭 호이안 4일 593,000원~ 현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세부 하나투어 AVPF01_A 세부 파타야 5일, 6일 494,000원~ 주 4-6회 운항·일과별상미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방콕 하나투어 AVPF01_X 방콕 파타야 5일, 6일 540,000원~ 수목 3박5일, 토일 4박5일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대만 savepack ATPF15_Z 대만 지우펀-스펀 4일 490,000원~ 주 4-7회 운항·일과별상미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코타키나발루 savepack AMPF02_1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499,000원~ 주 3박5일 일 4박5일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보라카이 savepack AVPF10_1 보라카이 4일, 5일, 일과리조트 484,000원~ 주 3박5일 일 3박5일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중국

<p>백두산 savepack CNPF02_A 연길 백두산 4일, 5일 44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상해 하나투어 CCPF01 상해 주가 4일, 5일 32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상해/황산 하나투어 CCPF06_1 상해 황산 4일, 5일 64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신장통 하나투어 CSPF7_A 상해/하문/고양서 4일, 5일 91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p>	<p>상해/장가계 하나투어 CCPF02 상해 장가계 4일, 5일 1,24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상해/계림 하나투어 CCPF05_W 상해/계림 4일, 5일 1,19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가별>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안내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메니얼]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목적지 여행경보]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망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지하1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2인1실/교외편 환급/비사(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여행 보충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